

## 북한 외무성 시료채취 거부 담화의 의미와 파장

전 성 훈

통일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북한 외무성이 핵시설 신고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검증 방법을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하고 미국의 일관된 요구사항인 시료채취를 거부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주요 핵시설에서 핵물질 시료를 채취, 분석하는 것은 북한의 과거와 현재의 핵개발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다. 핵개발을 포기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고 뭔가를 숨기려 한다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시료채취야말로 김정일 정권의 핵포기 의지를 시험할 수 있는 가늠자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시료채취 거부 담화는 신속한 북핵폐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에 또 한 번의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북한 정권은 무엇을 노린 것일까? 우선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압박했던 부시 행정부에 대한 앙갚음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 내세웠던 대북협상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임기 말에 몰두했던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업적 만들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단물을 빨아먹은 북한이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부시 행정부를 저버린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결국 부시 행정부도 북한과 협력하면 끝이 좋지 않다는 징크스를 피하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새로 출범하는 오바마 행정부를 북·미 직접대화로 끌어들이는 미끼이기도 하다. 의도적으로 상황을 악화시켜서 상대방의 이목을 끌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 판을 벌이는 전형적인 북한식 협상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물론 시료채취 거부 행위가 모든 합의에서 ‘검증 가능성’을 중시하고 북한에게 두 번 다시 속지 않겠다는 오바마 진영에 대한 도전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오바마 정부가 시료채취 문제를 이유로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핵에 대한 북한 정권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북·미 직접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즉, 시료채취 거부는 먹을거리를 크게 보이게 해서 상대로 하여금 덥석 물게 하는 유인효과를 낳을 것이다.

반면에 6자회담의 장래는 불투명해졌다. 이번 담화로 북·미 직접대화의 동기가 더 강해지는 데 비례해서 6자회담의 비중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6자회담보다 북·미 대화를 선호했던 북한인 만큼, 이번 담화는 북핵협상 구도를 6자회담에서 북·미 회담으로 전환하려는 계약이라고 할 수도 있다. 물론 북한이 6자회담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미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6자회담 합의사항 가운데 유리한 부분은 활용할 것이다. 마치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조차 하지 않으면서 북·미 평화협정을 주장할 때만 남북한 간에는 기본합의서에서 불가침 약속을 했으니 평화협정은 북·미간에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시료채취 거부는 북한이 핵무장 능력의 전모를 공개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오바마 행정부가 당분간 북핵폐기를 위해 전력하겠지만 당사자인 북한이 그럴 의사가 없다면 북한 비핵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협상으로 안되면 무력이라도 쓰겠다는 민주당이지만 이라크에 발목이 잡혀있고,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북한 정권과 군부가 사실상 오바마 정부를 상대로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검증 방법에는 잘못된 점이 많다. 샘플채취, 미신고시설 사찰, 핵무기 관련 시설에 대한 조사 등에서 북한과 미국의 말이 크게 다르다. ‘현장방문’이란 표현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 통상 ‘방문’이란 집주인의 허락 없이는 집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검증활동 자체가 북한의 의도에 좌우될 수 있는 맹점을 안고 있다. 미국 협상팀이 지난 90년대 핵사찰 협상의 노하우를 알고 있었다면 이런 식의 합의는 없었을 것이다. 당초 ‘5 對 1’의 구도를 기대했던 6자회담에서 실제로는 북한이 의제를 선점하고 협상과 이행을 주도해 나갔듯이, 검증협상도 북한에 의해 끌려 다닌 형국이다.

시료채취 거부는 우리 정부에게도 중요한 과제를 안겨 주었다. 이제 우리도 6자회담에 대한 중간평가를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새로 출범할 오바마 정부도 마찬가지로, 6자회담의 전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새로운 북핵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떠나간 노무현·부시 정부의 산물인 6자회담을 아무런 비판이나 평가도 없이 새정부 대북정책의 토대로 삼은 것 자체가 정책적 오류였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새로운 북핵정책이 나와야 하고, 이를 토대로 오바마 정부와 새로운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